



AI와 GovTech, 활용 유형과 정책 시사점¹⁾

⇒ GovTech란?

- GovTech는 공공데이터 AI를 활용해 공공부문의 대국민 서비스를 빠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새로운 방식의 서비스
 - 서비스 개발 과정에서 정부가 관련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 지원이 동반
 - GovTech란 용어는 '16년 싱가포르가 'GovTech Singapore'라는 기구를 출범하면서 최초 사용
 - 이후 월드뱅크 등 글로벌 기구들과 시민단체, 투자회사 등이 사용하며 보급되었으며,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디지털정부 구현의 주요 기술과 제도적 지원을 의미
 - 가트너 그룹의 보고서에 따르면, '26년까지 정부 기관의 70% 이상이 인간의 행정 의사결정을 개선하기 위해 AI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정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서의 AI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GovTech는 큰 틀에서 디지털 정부, DX와 방향성이 일치하지만, 혁신적인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민간 비즈니스의 성장 지원도 특징
 - 공공 부문과 스타트업·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촉진해 혁신적인 기술 솔루션 개발과 성장을 지원하고 이를 통한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개선
- ※ 유명 AI 기업인 팔란티어는 2003년 설립 이후 초기에 CIA, FBI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 정부 기관과 협력한 기술개발을 통해 보안 분야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

⇒ 우리나라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주관하는 GovTech 창업 기업 지원 사업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해 GovTech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GovTech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22년 세계은행이 발표한 GovTech 성숙도(GovTech Maturity Index, GTMI)에서 198개국 중 1위를 차지
 - 대표 사례로는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국민 이용도가 높은 3개 플랫폼을 통한 교통, 교육, 건강 등 분야에서 민원 사무 안내 및 처리하는 국민 비서 서비스
- 정부는 GovTech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은 공공데이터와 민간의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 모델을 구축하고 있음

1)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황성수 교수(sungsoohwang@yu.ac.kr)

본고는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KISTEP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 창업·사업화 자금, 클라우드 인프라 비용, 데이터셋 구축, SW 품질 검증 등 경제적 지원과 인큐베이팅, 컨설팅, 홍보·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을 병행

- GovTech 산업 활성화는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으며, ▲대국민 디지털 융합 서비스, ▲지역·사회문제 해결, ▲공공 인프라 혁신의 세부 분야로 구분

⇒ 우수사례 코딩(CODIT): 정책·규제 대응의 AI 파트너

- 코딩은 우리나라 최초로 법·규제·정책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
 - 코딩은 기업들이 국회와 정부의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AI와 데이터 기술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 리스크를 예측하고 관리할 수 있는 툴을 제공
 - 국회 논의, 해외 법안, 통상 분쟁 등의 방대한 자료를 AI가 정성·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정책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

⇒ GovTech는 폭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AI 기술의 활용을 공공데이터와 정부 지원과 결합해 기술 발전, 산업 진흥, 공공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목표를 추구·달성할 전망

1 AI 정부 서비스 사례2)

⇒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26년 3월 발간한 AI 정부 서비스 사례집에 따르면, AI 정부 서비스는 환경, 고용노동, 사회복지, 안전, 일반행정의 분야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음

- 우수 사례로는 홍수 예보 시스템, 노무 상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이 존재
 - 이러한 우수 사례들은 AI 활용 측면에서는 자동화(automation), 시뮬레이션 분석 및 예측, 의사결정 지원 등의 유형으로 분류 가능

〈 국내 AI 정부 서비스 우수 사례 〉

부처/지자체	사례
기후에너지환경부	AI 홍수 예보 시스템, AI 기반 스마트 정수장
고용노동부	AI 기반 산재 조사 분류 모델, 근로감독관 AI 지원 시스템
보건복지부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AI 상담
국토교통부	AI 운전 자격 확인 시스템
행정안전부	딥페이크 불법 콘텐츠 탐지 분석 모델
국무조정실	초거대 AI 활용 통합 연구 지원
지식재산처	AI 기반 특허심사 업무 지원 서비스
법제처	생성형 AI 법령 정보 서비스
인천공항공사	AI 기반 여객 흐름관리 시스템

2) 황성수 (2025) AI 활용 정부 서비스의 사례와 유형 분석: 새 정부 AI 정부 서비스 성공을 위한 전략 설정 제언. 정보화정책

부처/지자체	사례
지자체	맞춤형 AI 돌봄 서비스 (경기도), 경기 데이터 찾아드림 (경기도), AI 다국어 동시통역 민원 안내(서울 용산구), AI 부정주차 관리 시스템(서울 강남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NIPA의 공공부문 AX*를 위한 AI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 신규 공고³⁾는 ▲공공서비스 혁신, ▲국민의 AI 일상화, ▲공공 분야의 AX 가속화 실현을 3대 목표로 설정

● 민관협력을 통해 개발된 솔루션과 서비스의 부처 현장 적용 및 확산을 추진

* AX(AI Transformation)는 인공지능 전환 즉 디지털 전환(DX)을 넘어 인공지능 기술을 핵심 동력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하며, 공공 AX는 정부 AI 대전환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정부 업무 프로세스, 행정 서비스 제공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

- 공고는 총 20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과별 혁신을 위한 AI 솔루션·플랫폼·서비스 개발과 실증을 제시하고 분과별 1개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

〈 2025년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 신규 공고 〉

번호	분과명	과제명	협업부처 (협업기관)
1	조세심판	AI 기반 범국민 조세불복 통합검색 및 사건조사서 작성 지원 솔루션 개발·실증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2	건강관리	AI 기반 건강습관 개선정보 제공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질병관리청
3	복지행정	AI 기반 대국민 복지 안내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식품안전	국민 안심 식탁을 위한 AI 수입식품 검사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식약처 (식품안전정보원)
5	산재보상	신속·공정한 AI 산재보상 플랫폼 개발·실증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6	생활화학	식품 모양 생활화학 제품의 오인·섭취 사고 방지를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	가뭄대응	농업용 지하수 예측·활용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8	감염병대응	건강한 내일을 위한 감염병 대응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질병관리청
9	교육훈련	중소기업 원격훈련 통합 관리 및 지원 AI 솔루션 개발·실증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10	분쟁조정	소비자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11	안전환경	내 손안의 AI 폐기물 처리 도우미 개발 및 실증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12	검역관리	AI 기반 해외여행자 친화적 검역 시스템 개발·실증	질병관리청

3) <https://www.nipa.kr/home/2-2/16291>

번호	분과명	과제명	협업부처 (협업기관)
13	농기계	농작업 사고제로! AI 농기계 안전운행 서비스 개발·실증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14	특허정보	모두를 위한 EASY 특허정보 Agent 개발 및 실증	특허청
15	법제정보	K-산업 수출 지원을 위한 세계법제정보 혁신 AI 개발·실증	법제처
16	스마트팜	스마트팜 재배관리 AI 에이전트 개발 및 실증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17	근대자료	한국 근대 다문자 자료 활용 지원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교육부 국사편찬위원회
18	근로감독	AI 기반 노동법 준수 지원 솔루션 개발 및 실증	고용노동부
19	자살예방	24시간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 및 고위험군 조기 발굴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보건복지부 (생명존중희망재단,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20	인포데믹	인포데믹 관리 AI 솔루션 개발 및 실증	질병관리청

출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 이 외에도 미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도 공공 조달, 법률 지원 등 정부 업무 및 국민의 공공 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

〈 해외 우수 AI 정부 서비스 사례 〉

국가	서비스명	대상	상세 내용
미국	Acqbot	공공 조달 담당 공무원 및 계약관	• AI 기반의 연방 정부 조달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으로, 조달 요구서 작성부터 시장 조사, 계약 문서 생성까지 복잡한 행정 절차를 지능형 에이전트가 지원 및 신속화
영국	Darci & Ali	더비(Derby)시 주민 및 지방정부 공무원	•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의 지방 정부·민원 통합 AI 비서 서비스로, 복잡한 주민 복지(성인 돌봄 등) 질의에 9개 국어로 다국어 실시간 자연어 답변을 제공하고 취약 계층의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상담원에게 자동 연결
프랑스	Doctrine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계 종무원 및 공공 전문가	• AI 기반 법률 연구 및 사법 정보 분석 플랫폼(Legal Graph)으로, 2억 개 이상의 실시간 링크로 연결된 판례·법령 데이터를 자연어 검색을 통해 실시간으로 비교·추론하고 신속한 법적 의사결정을 지원
싱가포르	Pair	싱가포르 정부 전 부처 공무원	• 공공 부문 전용 보안 맞춤형 생성형 AI 프레임워크로, 정부 기밀 데이터 유출을 원천 차단하면서 공문서 초안 작성, 회의록 자동 변환, 건축 법규(IDD) 및 의료 가이드라인 보고서의 대량 검토 작업을 자동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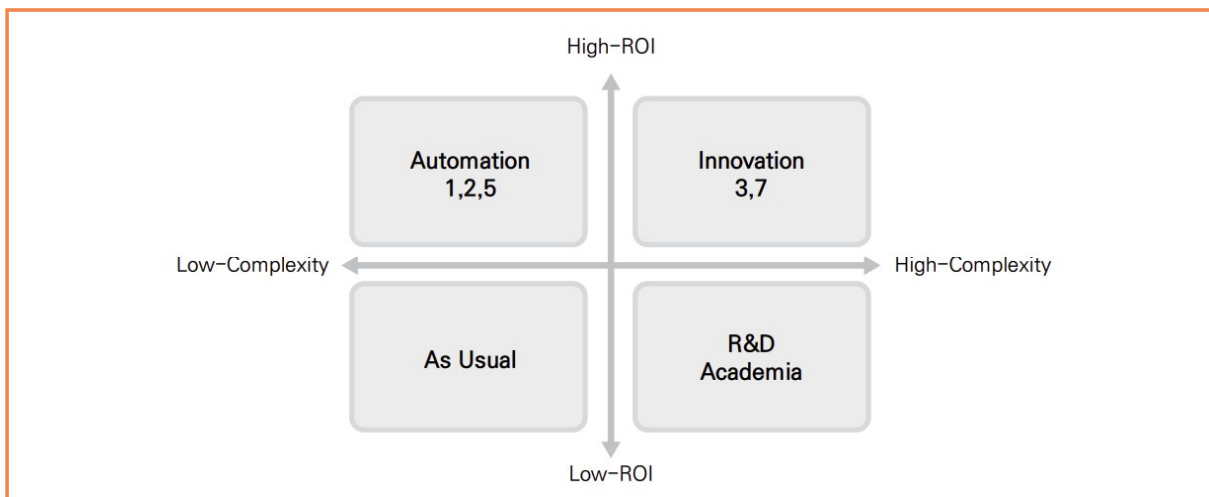
출처: World Bank. 2020.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Public Sector: Maximizing Opportunities, Managing Risks. Equitable Growth, Finance and Institutions Insight

2 AI 정부 서비스 유형

⇒ 우리나라에 제공되고 있는 공공 부문 AI 활용 사례는 자동화와 혁신으로 분류 가능하며, 이는 복잡성(Complexity)과 투자 수익률(ROI)로 구분

- 자동화와 혁신은 복잡성에서 주로 차이를 보일 것이고, 또한 공공영역에서 세금을 활용한 정부 AI 서비스는 ROI 측면을 고려해야만 함

〈 AI 공공 분야 사례 유형 분류 〉



출처: 황성수 (2025) AI 활용 정부 서비스의 사례와 유형 분석: 새 정부 AI 정부 서비스 성공을 위한 전략 설정 제언

- 자동화 유형(Automation)은 효율성을 추구하며 성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기 용이
 - 대표적 자동화 유형 사례로는 AI 챗봇 활용 민원 상담,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 활용 행정 서비스, AI 센서 활용 자율작업 트랙터 등
- 혁신 유형(Innovation)은 당초 정책 의사결정 지원 도구로 출발하였으나, 데이터가 쌓이고 정책 지식이 축적되면서 전반적인 혁신 도출이 가능하도록 진화
 - 단순히 프로세스를 축소시키는 혁신을 넘어 정책을 재구성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나아갈 잠재력을 가지며, 대표적 혁신 유형 사례로는 에너지 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서비스, 스마트시티 인프라 관리 시스템 등
- 현상 유지 유형(As Usual)은 AI 및 자동화 도입이 가능하더라도 현재 상태보다 자원(세금)절약 효과가 미미하므로 중요도가 낮은 서비스
- 연구 유형(R&D Academia) 유형은 비용도 크며, 혁신 성과에 대한 기대가 낮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
 - 일반적인 정부 부처에서 제공하는 대신 연구재단 등 지원 기관에서 주로 활용

➔ 우리나라의 정부 AI 서비스는 단기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동화와 중장기적 정책·서비스 혁신을 위한 투자 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추진 필요

- 정부 AI 서비스 기획 시 자동화 유형과 혁신 유형의 균형이 중요
 - 단기 효율성 중심의 자동화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더 큰 정책 효과와 파급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 유형에 대한 투자가 소홀해질 우려
 - 앞서 살펴본 국내 사례에서는 자동화 유형과 혁신 유형이 모두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어, 향후 균형 있는 포트폴리오 관리가 중요
- 학술계의 연구개발은 자동화 및 혁신 유형으로 이어지는 기술개발의 출발점으로 기능
 -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이 정부 서비스 현장에 적용되면서 자동화 또는 혁신 유형으로 확장될 가능성 존재
 - 자동화 사례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향후 혁신의 플랫폼이 되거나, 자동화의 축적이 새로운 혁신을 유도할 가능성을 제시
- 정부 AI 서비스 추진 시 자동화와 혁신 유형 간 균형 있는 투자 비중이 중요
 - 단기적으로는 성과 측정이 용이한 자동화 유형을 중심으로 확산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정책 재구성 및 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혁신 유형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예컨대 자동화와 혁신 유형 간 투자 비중을 7:3 수준으로 설정하는 등 정책 목적과 성과 창출 가능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전략 검토 가능
- 연구개발 기반의 AI 정부 서비스 연구개발도 지속적으로 확대 필요
 - 정부는 인공지능 혁신융합대학 사업, 문제해결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AI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기반 사업 추진 중

➔ 정부 AI 서비스의 성공적 확산을 위해서는 개별 기술 도입을 넘어, 기능별 활용 가능성과 실행 복잡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리 체계 마련 필요

- 세계경제포럼(WEF)는 「Making Agentic AI Work for Government (2026)」를 통해 공공부문 Agentic AI 활용을 위한 분석틀과 실행 방향을 제시
 - Agentic AI 잠재력(potential)과 실행 복잡도(implementation complexity)를 기준으로 70개 정부 핵심 기능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조망

〈 정부 핵심 기능의 9대 유형 〉

대분류	유형	기능
핵심 서비스 제공 (Core service delivery)	공공 서비스	• 공공정보 및 안내 제공, 신청 접수 및 초기 처리 등
	시민 소통 및 교류	• 시민 만족도 및 정서 분석, 공공 협의·의견수렴 지원 등
	보안 및 리스크 대응	• 사이버보안 모니터링, 위협 인텔리전스 및 조기경보 등
	규정 준수 및 감독	• 부정행위 탐지 및 예방, 기업 규제준수 여부 점검 등
정책 및 거버넌스 (Policy and Governance)	정책 집행	• 정책 이행 모니터링, 프로그램 이행 계획 수립 등
	정책 기획 및 전략	• 공공수요 식별 및 분석, 정책 예측 및 시나리오 모델링 등
기능 및 인프라 지원 (Support functions & enabling infrastructure)	운영 및 자원 관리	• 입찰 준비 및 낙찰자 선정, 예산 계획 및 배분 등
	조직 및 인력	• 인재 채용, 인력 계획 및 분석 등
	IT 인프라 및 데이터 거버넌스	• 데이터 품질 보증·검증,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교환 관리 등

출처: WEF, 2026. Making Agentic AI Work for Government: A Readiness Framework

- WEF는 정부 기능별 AI 준비도를 high, medium, low의 세 구간으로 구분
 - (High)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 실행이 가능한 단계
 - (Medium) 단계적 추진을 전제로 주요 제약조건과 실행요건을 점검해야 하는 단계
 - (Low) 모니터링과 테스트를 병행하며 장기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단계
- 성공적인 Agentic AI 활용을 위해 기능 중심의 접근과 실현 가능성 중심의 단계적 추진을 강조
 - 부처 단위가 아닌 정부 기능 차원에서 AI 적용 가능성 사고 및 설계 필요
 - 실현 가능성(feasibility)과 도전성(ambition)을 균형 있게 고려 필요
 -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능과 준비도 구간부터 우선 추진 필요
 - 현장 문제와 제도적 맥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용 방안 설계 필요
 - 기능과 준비도가 시간에 따라 진화할 수 있음을 고려한 관리 체계 필요
- AI 정부 서비스 지원 사업은 유형·기능·준비도 구간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이를 바탕으로 균형 있는 지원과 사후관리를 추진할 필요
 - 개별 사업의 기술적 가능성뿐 아니라 정책 효과, 실행 복잡도, 준비도 수준을 함께 고려한 포트폴리오 관리 필요
 - 자동화·혁신·R&D 등 유형별 사업이 적정 비율로 배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설계 필요

3 미국 연방정부의 AI 거버넌스 입법 방향

➔ 미국의 AI 거버넌스는 연방정부가 단독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구조를 넘어, 첨단 AI 기술을 보유한 빅테크와의 협력·견제를 통해 형성되는 양상

- AI 기술의 개발·운영 역량이 민간 기업에 집중되면서, 빅테크는 단순한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국가 AI 전략과 공공부문 AI 활용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로 부상

- 과거 인터넷 확산기에는 정부 연구개발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확산되는 흐름이 강했다면, AI 분야에서는 정부가 민간의 기술 역량과 인프라에 의존하는 비중이 확대

- 이에 따라 연방정부는 AI 기술기업의 혁신 역량을 활용하면서도, 국가안보·사이버보안·공공서비스 안정성 측면에서 관리와 조정의 필요성을 동시에 제기

- 미국 연방정부는 AI 행동계획* 및 AI 보안과 관련한 후속 행정명령**을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 사이버보안, 국가안보 관련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개

* Winning the Race: America's AI Action Plan: '25년 7월 발표된 백악관 AI 정책 청사진으로, AI 혁신 촉진, AI 인프라 구축,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주요 축으로 제시

** EO14409, Promoting Advanced Artificial Intelligence Innovation and Security: '26년 6월 발표된 행정명령으로, 고성능 AI 모델의 보안성 검토와 연방 사이버 방어 강화가 주요 내용

- 특히 연방기관의 AI 활용이 확대될수록 공공 시스템의 취약점, 데이터 보안, 주요 기반시설 보호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사이버보안 및 인프라 보안국(CISA) 등은 연방·주·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보안 지침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임

* 행정명령은 AI 기반 취약점 탐지, 패치 우선순위 조정, 주요 기반 시설 보호 등을 위해 민간 AI 업계와 협력하는 AI 사이버보안 전담 체계 구성을 지시하고, 예산관리국에는 관련 연방 보조금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요구

- 또한 Antropic의 Mythos 사례와 같이 고성능 AI 모델의 사이버 역량이 부각되면서, 국가안보국 등이 참여하는 비공개 벤치마킹과 모델 사전 검토 체계가 논의되고 있음

- 의회 차원에서도 연방정부 중심의 AI 기준을 마련하려는 입법 논의가 진행 중

- GAAIA 법안*은 고성능 AI 시스템의 투명성, 독립 검토, 사이버보안 정보 공유, 주별 규제와 연방 기준 간 관계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시



* The Great American Artificial Intelligence Act: 프론티어 AI 거버넌스, AI 표준·검증 체계,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을 포괄하며, 일부 주 단위 AI 규제에 대해 한시적으로 연방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방향을 포함

- 이에 대해 연방 차원의 통일적 기준이 공공서비스와 산업 생태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존재
- 반면 주정부의 다양한 정책 실험과 지역별 접근을 과도하게 제약할 경우,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GovTech 서비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
- 이러한 논쟁은 AI를 민간 자율에만 맡기기보다, 국가안보와 공공서비스 안정성 차원에서 연방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려는 정책 흐름을 보여줌
- 이러한 흐름은 GovTech 생태계에서 정부의 역할이 단순한 기술 도입자가 아니라, 민간 AI 역량을 공공서비스로 전환하는 조정자로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
 - AI 정부 서비스가 확산될수록 정부는 단순한 수요자나 규제자가 아니라, 민간 AI 기술을 공공서비스에 안전하게 도입·조정하는 거버넌스 주체로 기능해야 함
 - 특히 공공부문 AI 활용에서는 기술 성능뿐 아니라 보안성, 책임성, 조달 기준, 영향 평가, 부처 간 상호운용성 등이 함께 관리되어야 함
 - 이는 우리나라 역시 GovTech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AI 역량을 적극 활용하되, 공공서비스 적용 기준과 투자·성과관리 체계를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
- ➔ 미국은 AI 관련 행정명령과 입법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 AI 활용, 사이버보안, 연구개발 투자, 조달 체계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 중
 - 행정명령 후속 조치는 국가안보, 사이버보안, 고위험 AI 모델 관리, 연방 예산 조정 등을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
 - 주요 후속 과제로는 국가안보시스템 및 국방부의 사이버 우선조치, CISA의 의무 운영지침 마련, AI 사이버보안 협력체계 구성 등이 제시
 - 고위험 AI 모델을 식별하기 위한 벤치마킹 절차와 개발사가 정부에 모델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자발적 협력체제도 검토 대상
 - 연방정부의 AI 투자와 조달은 연구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안보와 공공부문 활용 중심으로 재편되는 흐름
 - 미국의 AI 연구 지원은 국립과학재단, 국방고등연구계획국, 국립보건원, 에너지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에는 국방·안보 분야의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

- AI 조달까지 포함할 경우 국방부 중심의 편중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⁴⁾, 이는 미국 AI 정책이 기술경쟁력 확보와 안보 목적을 강하게 결합하고 있음을 보여줌
 - ※ '26년 연방 AI 조달 지출 중 잠재 계약 가치의 98.9%를 국방부가 차지
- 학계와 민간 부문에 대한 지원도 공공부문 AI 활용 기반을 넓히는 방향으로 전개
 - NSF의 국립 AI 연구소, DARPA(국방고등연구계획국) 프로그램, SBIR/STTR* 프로그램 등은 AI 연구자와 기업이 연방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춰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요 통로로 기능
 -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 중소기업 혁신 연구 및 기술이전 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연구개발과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연방 프로그램
 - 대학들도 AI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개별 학과 단위가 아닌 대학 차원의 AI 인재 채용을 확대하고 있으며, 채용된 인력이 각 학과에 배치되는 방식으로 융합연구 기반을 강화
 - ※ 이러한 채용은 기계학습 등 핵심 기술 분야뿐 아니라 보건, 로봇틱스, 공공정책, 거버넌스 등 활용 분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정부 서비스와 공공문제 해결형 AI 연구 기반으로 연결될 가능성
- 연방정부는 자금 지원 방식을 통해 주정부와 민간 부문의 AI 정책 방향에도 영향력을 행사
 - 일부 연방 자금은 주정부의 AI 규제 환경과 연동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연방정부가 재정 지원을 정책 조정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
 - 즉 미국은 AI 기술개발뿐 아니라 규제, 조달, 보안, 공공서비스 적용까지 연방 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수단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접근
- 이러한 미국 사례는 GovTech 생태계 활성화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 공공부문 AI 확산을 위해서는 단순한 연구개발 예산 확대나 개별 사업 지원을 넘어, 조달·보안·데이터·성과관리·부처 간 조정이 결합된 종합적 투자 체계가 필요
 - 특히 정부 AI 서비스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별 집행보다 공공부문 전체의 활용 현황과 성과를 추적·학습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중요
 - 이를 위해 부처별 AI 사업, 조달 현황, 실증 결과, 성과지표, 보안·영향평가 결과를 추적·공개할 수 있는 온라인 아카이브와 대시보드 구축 필요
 - 아울러 혁신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을 확대하기 위해 과도한 입찰 요건을 완화하고, 성과 기반 조달, 실증형 조달, 단계적 계약 등 GovTech 친화적 조달 방식의 확대 필요

4) Brookings (2026.5), Where does federal AI spending stand in 2026?

4 AI·거버넌스 및 규제에 대한 시사점

- ⇒ 미국 AI 거버넌스는 예산관리국(OMB)이 주도권을 가지고 범부처 AI 정책 및 사업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체계⁵⁾
- 미국 연방 정부 산하 기관들은 매년 기관의 AI 활용 사례 목록을 작성해, 예산관리국에 제출하고 기관 웹사이트에 공개용 버전을 공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AI 사용에 따른 고영향 여부에 대해 사전 식별 및 위험에 대한 정보와 관리 방안을 보고해야 하며, 이는 공기관의 AI 활용에 대해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위험관리를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파악
 - 연방정부 부처 및 기관별 최고 AI 책임자(CAIO, Chief AI Officer)를 임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CAIO가 실효적인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
 - CAIO가 단순 자문역이 아닌 기관의 AI 도입·활용 정책을 전담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환경을 조성
 - 현재까지는 AI를 활용한 분야의 가장 큰 비중은 기관의 내부 업무 지원 분야로 기관 고유 업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도입·활용 중
- ⇒ 우리나라는 미국의 예산관리국과 같은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으로, 대통령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근거로 AI 거버넌스를 정립할 방침
- 우리나라도 지금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 Chief Data Officer) 제도를 격상시켜 CAIO로 변경할 계획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모든 국가 기관은 CDO를 임명해야 함
 - '25년 9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에 CAIO 협의회가 출범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
 - CAIO 협의회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등 국가 AI 정책과 각 부처 AI 사업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
 - 다만 미국과 같이 각 부처의 AI 활용 현황, 투자 계획, 지원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조정하는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
 - '26년 초 발표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과 함께 AI 예산 사업이 9.9조 원 규모로 확대되고, 41개 부처에서 총 741개의 AI 사업이 추진될 예정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6) 미국 AI 활용 사례를 통한 공공 AX 현황 분석 및 정책 시사점

- 그러나 현재 사업 목록은 부처별·사업별 정리에 그치고 있어, 향후 사업 추진 상황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요
- 이에 따라 CAIO 협의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AI 활용 전반에 대한 총체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
- 개별 부처의 사업 집행 기준 마련을 넘어, AI 활용 유형, 영향 평가, 기술 학습,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 소버린 AI, 국가대표 AI 프로젝트 등 새로운 정책 시도가 부처별 사업 집행과 기존 평가 방식에 머물지 않도록, 공공부문 AI 투자와 활용을 조정·유도하는 거버넌스 구조 개편 필요